

외환위기 전후 자본축적 위기형태의 변화: 유동성위기에서 실현위기로*

이 덕 재**

논문초록

과거 왕성한 자본축적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한국의 고도성장체제는 1997년 발생한 IMF외환금융위기와 함께 체계적으로 해체되었다. 외환위기 이후 자본축적은 급격히 둔화되었고 이윤분배율은 상승하였다. 결국 수익성 규준이 강화되면서 고도성장이 관찰되었던 이윤율의 장기추세적 하락은 저지되었다. 이 논문은 이러한 변화를 자본축적론의 핵심변수들, 즉 이윤율과 그 결정요인인 자본구성 및 이윤분배율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특히 위기형태적 관점에서 외환위기 이전 '유동성위기'적 축적구조에서 '실현위기'적 축적구조로 이전하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핵심 주제어: 자본축적위기형태, 유동성위기, 실현위기

경제학문헌목록 주제분류: E3, N1

투고 일자: 2011. 8. 18. 심사 및 수정 일자: 2011. 10. 27. 게재 확정 일자: 2011. 12. 20.

* 이 논문은 2010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0-411-B00028). 이 논문은 2010년 한국사회경제학회 여름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에 토대를 두고 있다. 당시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안현효 교수에게 감사드린다. 또한 이 논문이 개선될 수 있도록 꼼꼼하면서도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익명의 세 분 심사자들에게도 감사드린다.

**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 e-mail: econdjlee@keis.or.kr

I. 서 론

1997년의 IMF 외환금융위기(이하 “외환위기”)는 한국에서 전통적 경제성장모형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모순적 구조가 폭발한 것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즉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10년 간의 한국 자본주의 역사는 이미 생명력이 고갈된 낡은 질서를 억지로 끌고 온 것에 지나지 않”았고 따라서 “1997년의 경제위기는 그 모순의 폭발일 뿐이”었다는 것이다(김상조, 2005: 8). 그리하여 “위기의 근본원인이 실제 어디에 있든 간에 이번 경제공황을 계기로 지금까지의 한국경제의 발전 모델은 결정적으로 파산했다”(김형기, 1999: 122)는 것이 정치경제학계의 일반적 해석이었다.

이러한 진단이 정치경제학적 접근의 해석만은 아니다. Barry Eichengreen 역시 외환위기에 관한 한 좌담회에서 외환위기는 전통적 성장모형과 변화된 거시경제적 환경 간의 ‘부조화’의 결과로 이해한다. 즉 자본재 수입을 위한 수출의존적 외연적 성장모형이 자본의 한계생산성 저하와 함께 한계에 직면하자 이 전통적 성장모형을 유지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채택했던 고정환율제 하 자본자유화가 외환위기와 함께 실패로 끝났다는 것이다(서울대학교 국제금융연구센터, 2002: 21-23). 따라서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는 과거와 다른 구조변화를 겪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실제 엄밀한 경기순환론적 실증분석 결과들은 대부분의 거시경제지표가 외환위기 기간을 전후로 구조적인 변화를 겪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조하현·황선웅, 2007; 이재준, 2009).

그러나 과거 전통적 경제성장 혹은 자본축적의 응집성에 대한 넓은 동의와는 달리 -그것이 국가주도적 관점이건 혹은 시장중심적 견해이건- 외환위기 이후의 자본축적 메커니즘에 대한 논의는 분산적이고 혼란스럽다. 물론 현상적으로 외환위기를 전후해서 과거 고부채-고투자-고성장 모형의 저부채-저투자-저성장 모형으로의 이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이전의 구조적 특성에 대한 체계적 해명은 빈약하다. 외환위기 이후 10년 동안의 급속한 성장둔화 원인을 포괄적으로 분석하고자 했던 우리나라 주요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한 보고서조차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한진희 편, 2007: 1-2)라고 토로하고 있다.

물론, 외환위기 이후의 한국경제를 구조적으로 포착하려는 정치경제학적 노력들

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신자유주의적 금융세계화에 주목했던 논의들(조영철, 2007), 부분적으로 활성화되었던 맑스비율분석(정성진, 2006) 및 자본축적체제론적 관점(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06), 그리고 어느 시기부터인가 주요한 담론이 된 ‘양극화’논의들(유태환 외, 2008)은 대표적이다. 그렇다 해도 그간의 논의들은 대체로 한국경제구조변화에 대한 총체적 설명이라는 점에서 보면 지나치게 추상적이거나 묘사적이고, 또 때로는 부분적 및 단편적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자주 지적되는 방법론적 한계 때문에 방대한 양의 문헌들을 발표하고 있는 주류경제학적 접근의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해서 구조적 분석은 매우 빈약하다.

이러한 상황은 외환위기 이후 사회경제구조변화의 복잡성 및 관련 이론개발의 지체 등이 맞물린 결과이겠지만 무엇보다 자본축적론적 관점에서 추상적 이론과 구체적인 현실 간의 연관이 체계적으로 포착되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본축적의 특수한 형태분석의 빈곤함이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 형태분석은 자본축적의 내적 논리와 긴밀하게 짜여져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자본축적의 위기형태에 대한 이 논문은 이러한 문제를 역으로 접근해보고자 하는 측면도 있다. 우리는 자본축적 에너지가 집약적으로 표현되는 이윤율의 간절한 공식을 이용하여 외환위기 전후 축적위기형태가 과거 유동성위기에서 실현위기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글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우선 2절에서 자본축적과 이윤율의 동학을 유동성위기 대 실현위기구조로 포착하려는 이론적 의미를 살펴본다. 이어 3절에서는 Laibman의 ‘일치경로’ 개념을 차용하여 한국의 장기역사적 일치경로를 경험적으로 추계하고 이윤율과 관련 핵심변수, 특히 자본구성 및 이윤분배율의 변화의 추이를 살펴본다. 4절에서는 자본구성과 이윤분배율에 좀더 천착하여 외환위기 이후 겪고 있는 저투자-저성장, 그리고 내수부문의 위축과 유례없는 수출증가가 실현위기적 측면을 띠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II. 자본축적과 위기형태: 유동성위기 대 실현위기

자본주의적 생산체계가 수립된 이래 눈부신 자본축적, 혹은 경제성장은 주목의 대상이었지만 동시에 이 과정은 위기와 혼돈의 역사로 점철된 험난한 과정이기도 했다. 자본축적은 주기적 호황과 동시에 위기를 겪어왔고 때로는 대공황기처럼 재

생산메커니즘의 전면적인 폭력적 중단과 같은 구조적 위기에 직면하기도 했다. 이러한 축적위기는 축적구조의 모순이 발현된 것이긴 하지만 그 형태가 동일한 것은 아니었다. 즉 “위기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지만 항상 똑같은 것은 아니”었다(Duménil and Lévy, 2009: 6). 예컨대 대공황기 케인스의 유효수요이론은 화폐경제체제가 전면화된 경제에서 경제위기의 총수요적 측면을 명징하게 보여주었다. 한편,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대공황에 자주 비견되었지만 역시 위기형태는 동일한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자본축적이 강제하는 내적 모순의 보편성과 그것이 현실화되는 역사적 형태 간의 연관성에 대한 해명은 결정적이다.

맑스가 판매와 구매의 분리 속에서 공황의 잠재적 가능성을 언급할 때 그것은 자본주의적 생산체계가 화폐경제의 특성을 갖는다는 점을 전제하는 것이었다. 물물교환경제를 전제로 한, 따라서 균형경제를 자동적으로 상정하는 ‘세이의 법칙’에 대한 맑스의 통렬한 비판은 이러한 인식에 기초해 있다.¹⁾ 실제 그의 재생산표식은 단순히 “경제의 현실적 모형이라기보다 오히려 세이의 법칙이 표현하는 이론의 허약한 기초를 보여주기 위한 개념적 장치”(Perelman, 1999: 720)였던 것이다. 특히 사적 노동의 사회적 인정이라는 ‘분리’에 기초한 상품사회, 그리고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에 의한 계급적대적 성격을 띤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에서 사회적 총생산물의 창조와 부문 간 분배는 이 생산물가치의 완전한 실현이라는 어려운 조건을 요구한다.²⁾ 자본의 형태변환과 순환, 즉 $M \rightarrow C \dots P \dots C' \rightarrow M'$ 에 대한 맑스의 아래의 언급은 이 조건의 어려움을 잘 보여준다.

“자본의 순환은 자신의 다양한 단계들이 서로서로 지체되지 않고 통과할 때만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만약 자본이 첫 번째 단계, $M - C$ 에서 중단된다면, 화폐자본은 퇴장(a hoard)의 형태를 띤다; 만약 이러한 일이 생산단계에서 발생한다면, 생산수단은 기능을 정지할 것이고 노동력은 고용되지 않은 채로 남게 된다; 최종

1) “모든 판매는 구매이고 모든 구매는 판매이기 때문에, 상품유통은 판매와 구매 사이의 균형을 낳는다고 하는 이론처럼 황당무계한 이론도 없다 ... 다른 사람 누군가가 구매하지 않는다면 누구도 판매할 수 없다. 그러나 누구나 그 자신이 판매했다고 해서 즉시 구매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 따라서 이 두 과정(판매와 구매-인용자)의 외적 독립화가 일정한 점에 도달하면 그 내적 통일은 공황이라는 형태를 통해 폭력적으로 관철된다”(Marx, 1976: 142-143).

2) 즉 맑스는 “상이한 생산부문 간의 상호의존이란 문제와 동시에 생산된 총가치를 사회의 여러 계급 사이에 분배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면서, 그것(재생산표식: 인용자)으로 경제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구조적 관계를 보여주려고 노력했”(Harris, 1972: 505) 던 것이다.

단계 $C' - M'$ 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한다면, 팔리지 않는 상품재고가 순환의 흐름을 차단한다”(Marx, 1978: 133).

그동안 맑스의 공황론을 주도하고 있는 이윤율저하경향론이 주로 자본주의 생산체제의 운명과 관련한 보다 장기적 시계에서 풍부한 논의들을 개발해 왔지만 맑스에 내재해 있었고 케인스가 전면적으로 밝혀준 유효수요 논의와 충분히 결합되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다.³⁾ 물론 여기에는 노동가치이론의 하중, 케인시언적 통찰력의 수용에 대한 정치적 거부감, 경기순환에 대한 설명도구의 빈약함 등 여러 요소들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러나 케인스에 대한 정통 맑스진영의 거부감을 고려하더라도 케인스가 개척한 거시경제적 분석을 전통적 축적론에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는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⁴⁾ 맑스 역시 조야한 과소소비설을 비판했지만 동시에 자본주의적 생산체제는 계급적 적대성 때문에 빈곤한 사회적 구매력에 제한받는다라는 점을 곳곳에서 강조했기 때문이다.⁵⁾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Sweezy (1942)의 ‘유동성위기’(Liquidity Crisis)⁶⁾와 ‘실현위

-
- 3) 맑스의 공황이론이 체계적으로 제시되지 못했다는 측면은 그 해석의 가능성이 열려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오늘날 정통이론으로 자리잡고 있는 이윤율저하경향론도 “Grossman 이전에는 거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Jacoby, 1975: 35)인데 즉 1920년대 말까지 Grossman 이전의 공황론은 Bauer의 불비례설과 Rosa Luxemburg의 과소소비설이 주요위치를 점하고 있었다(통시적 관점에서 공황론의 역사적 발전과정에 대해서는 Trigg (2006)을 참조할 것). 이 주제에 대한 논의는 별도의 지면이 필요할 것인데 특히 ‘위기형태’론적 측면에서 체계적인 연구들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4) 생산재와 소비재 “양 생산 부분 간에는 종합적 관련성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양 부문 간 발전의 균형을 취할 수 있게 하는 자동메커니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케인스 이후의 비맑스적인 이론문헌에서 유효수요의 문제라는 위장 속에서 인정되어 왔”으며 “맑스주의적 전통에서 유효수요의 문제는 잉여가치 생산의 한 측면을 이룬다”(Aglietta, 1994: 188-189).
- 5) “상품판매, 상품자본의 실현, 따라서 잉여가치의 실현은 사회일반의 소비수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대중이 빈곤하고 늘 빈곤한 상태를 유지하는 사회의 소비수요에 의해서 제한된다”(Marx, 1976: 363).
- 6) 본 논문에서 위기형태에 대한 용어의 번역과 관련하여 ‘유동성위기’에 대한 혼동이 있을 수 있다. 흔히 유동성위기는 경제의 펀드멘털과 무관하게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발생하는 ‘지급불능 위기’(insolvency crisis)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사용하는 유동성위기는 실물적 자본축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윤율 저하에 따른 펀드멘털의 위기라는 측면에서 이해된다는 점을 밝힌다. 용어가 주는 혼동의 우려가 있지만 위기형태에 대한 특성을 차별화하기 위한 잠정적인 선택이다. 또한 유동성위기에 대해 Bronfenbrenner는 ‘Liquidity’를, Laibman은 ‘Liquidation’을 사용한다. 우리나라의 사전적 의미는 두 용어 간 상당한 차별성이 있으나 이 논문에서는 ‘Liquidity’를 이용함을 밝혀둔다. 용어사용의 엄밀성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켜 준

기'(Realization Crisis)에 대한 논의에 주목한다. 그의 논의는 이후에 '전향을 거부한' 비맑스주의 경제학자 Bronfenbrenner(1965)에 의해 거시경제적 연립방정식 체계로 통합된다. 이어 30여 년이 지나 Laibman(1992, 1997)은 정통맑스주의적 개념들에 기초하여 자본주의적 발전이론에 대한 포괄적인 재구성을 시도하면서 Bronfenbrenner의 논의를 적극적으로 수용한다.⁷⁾ Bronfenbrenner와 Laibman의 논의를 중심으로 위기형태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자.

Bronfenbrenner(1965)는 통상적인 방식대로 생산부문을 I(생산재생산) 부문과 II(소비재생산) 부문으로 나누고 사회적 생산물을 각각 불변자본(C), 가변자본(V), 그리고 잉여가치(S)의 합으로 분해한다. 따라서 표준적 맑스경제학의 해석처럼 사회적 생산물가치의 수요공급 균형조건은 $C_1 + V_1 + S_1$ (공급) = $C_1 + C_2$ (수요) 혹은 $V_1 + S_1 = C_2$ 이다. 그런데 자본주의적 생산체계의 무정부성은 I부문과 II부문 간 성장률 껍의 확대 및 사회적 총생산물의 수요-공급간 균형조건의 파괴를 유도하는 성향을 갖고 있다.

이처럼 자본주의적 생산체제가 내장하고 있는 축적과정의 모순적 전개과정을 Bronfenbrenner는 두 가지 종류의 위기형태와 연관하여 설명한다. 어떤 특정시점의 이윤율 P' 이 특정한 최저수준의 이윤율 P'' 를 하회할 때, 자본가들은 자신들이 획득하는 전체 잉여가치를 소비와 재투자에 지출하지 않고 대신 유동자산(liquid asset), 특히 화폐적 자산을 퇴장(hoarding) 시키려고 할 것이다. 자본가들이 I부문, II부문 어디에도 잉여가치를 지출하지 않게 될 때 부문 간 균형조건은 깨진다. 이는 일종의 '유동성' 혹은 '퇴장'위기로 볼 수 있는데 따라서 Bronfenbrenner는 맑스의 『자본』에서 이미 케인스의 '유동성' 개념을 발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⁸⁾

한편, 특정한 최저기대이윤율 이하 수준의 이윤율저하를 상쇄하기 위해 자본은

익명의 심사자에게 감사드린다.

7) 이러한 논의의 흐름에 대한 Laibman의 다음과 같은 언급을 참조하라: “내가 알기로 Bronfenbrenner(1965)는 위기에 대한 이윤율 하락/이윤분배를 상승이라는 딜레마적 접근에 대해 최초로 언급하고 있다: ‘전향을 거부해 온’ 한 비맑스주의자에 의한 이 논문은 나의 사고를 형성하는 데 커다란 역할을 했다. 이 두 위기의 격발-유동성, 실현-은 Sweezy(1942)가 두 가지 구별되는 ‘유형’으로서 제시한 것인데, 그는 이 구분의 원천을 맑스에서 풍부한 참조와 함께 보여주고 있다”(Laibman, 1997: 98; 강조는 원문).

8) “케인시언 경제학의 독자들은 『자본』에서 이미 유동성선호 및 유동성함정에 관한 독트린을 예견할 수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Bronfenbrenner, 1965: 219).

잉여가치율의 상승을 시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따른 이윤율 상승은 또 다른 종류의 위기 즉 ‘실현’위기라는 대가를 치르게 된다. 이러한 논의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잉여가치율과 고용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데 Bronfenbrenner는 자신의 맑스에 대한 해석이 옳다면 잉여가치율과 실업률이 정의 관계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본다.⁹⁾ 따라서 다음과 같은 방정식이 추가된다:

$$U = U(S'), \quad S' = U^{-1}(U), \quad dU/dS' > 0 \quad (1)$$

위 식 (1)의 두 번째 식은 역함수형태이다. 위의 식에서 잉여가치율의 증가는 실업률의 증가 및 대중들의 구매력의 약화로 이어지면서 실현, 과잉생산 혹은 불비례 위기의 원천이 된다. 결국 자본축적이 강제하는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에 따른 이윤율저하가 유동성위기와 연결되어 있다면 잉여가치율의 증가에 따른 이윤율의 상승은 실현위기와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¹⁰⁾ 맑스가 늘 강조한대로 자본주의적 생산체제가 지닌 생산력의 무제한적 발전경향과 사회의 제한된 생산물 소비 능력 간의 모순을 위기형태적 측면에서 포착하고 있는 것이다.¹¹⁾ 거시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특정수준의 이윤율과 분배조건을 결정하는 고용수준, 즉 실업률 간의 안정적인 관계를 찾을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의 언급은 지금까지의 논의를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 9) Bronfenbrenner는 이에 대한 직관적인 설명을 노동시장의 수요공급적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노동시장의 수요측면에서 높은 잉여가치율은 대중구매력을 약화시키고 이어서 산출 및 고용을 약화시켜 결국 실업률을 높이게 되는 반면, 노동시장의 공급측면에서는 높은 실업(산업예비군)이 노동의 교섭력을 떨어뜨려 잉여가치율을 끌어 올리게 된다는 것이다.
- 10) 겸손하게 말하면서 Bronfenbrenner는 “소수파에 해당하지만 독창적인 것은 아닌 우리의 해석은 이들 한 측면의 견해 모두(유동성위기와 실현위기-인용자)를 딜레마, 혹은 진퇴양난의 형태 속에 통합하려는 것이”(Bronfenbrenner, 1965: 220)라고 밝힌다.
- 11) 잘 알려진대로 맑스는 자본주의의 운명을 결정짓는 이윤율의 향방이 결국 착취율, 즉 잉여가치율과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로 표현되는 기술진보라는 핵심적 두 변수의 움직임에 달려 있음을 보여준다. 전자가 주로 분배를 둘러싼 계급적 적대의 제도적 표현인 생산관계의 중요성을 가리킨다면 후자는 자본 간 경쟁의 힘이 추동하는 기술혁신에 의한 생산력의 발전 문제를 지시한다. Fine and Saad-Filho(2006)는 이런 관점에서 그동안 주요 공황론을 주도했던 과잉생산·과소소비·불비례·이윤율저하 이론들 “각각은 나름의 이론 체계를 가진 상호경쟁하는 맑스의 공황이론이라기보다는, 맑스 공황이론의 각 측면으로 분석하는 것이 더 유용할 것”이라고 제안한다. 이 논문에서 다루는 위기형태에 대한 논의도 기존의 논의를 보완하는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결국 자본가들에 의한 유동성 혹은 퇴장‘위기’(불황)을 회피할만큼 충분히 높은 이윤율과 주로 노동자들에 의한 과잉생산 혹은 실현‘위기’ 및 실업의 심화(산출물가치의 하락) 없이 이 체계의 산출물이 ‘실현되’거나 혹은 구매되도록 허용할 만큼 충분히 낮은 어떤 이윤율도 동시에 발견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체계를 정체 및 궁극적인 붕괴로 이끄는 것은 바로 이러한 딜레마이다”(Bronfenbrenner, 1965: 206; 강조 및 인용은 원문).

Laibman (1992)은 좀더 높은 추상수준에서 자본주의적 발전에 관한 일반적 논리 개척을 시도하면서 Bronfenbrenner의 분석을 통합적으로 재구성하고자 한다. Bronfenbrenner가 거시집계적 관점에서 자본축적의 내적 딜레마를 보여주었다면 Laibman은 자본축적의 미시합리적 논리를 거시집계적 역사적 분석 속에 통합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즉 Laibman은 실질임금율이 일정할 때 기존의 균형가격에서 높은 이윤율을 얻는 신기술의 도입이 새로운 균형가격 하에서 이윤율 저하를 초래할 필요가 없다는 ‘오키시오정리’(Okishio Theorem)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한다. Laibman은 실질임금율 일정 대신 착취율 일정 가정 하에서 오키시오정리를 반박하지만 자본축적이 초래하는 딜레마적 위기형태에 대한 그의 논의가 결국 자본주의적 경쟁이 초래하는 개별자본가의 이윤극대화를 위한 미시합리적 행위에 기초해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다.¹²⁾ 축적위기형태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Laibman의 논의를 간단히 살펴보자.

Laibman은 자본축적과정에 대한 ‘근본방정식’(The Fundamental Equation)으로 다음의 이윤율 공식을 제안한다:

$$r = \frac{P}{K} = \frac{P/Y}{(K/Y)} = \frac{\pi}{Q} \quad (2) \quad 13)$$

12) Laibman은 자본구성과 이윤분배율의 추이에 대한 비결정성문제를 둘러싼 고전적인 논의 아래 잠복하고 있었던 새로운 문제를 주목하면서 그것은 “개별자본가들의 의식 및 활동, 그리고 그러한 의식 및 활동의 거시적 혹은 집계적 결과 간의 관계와 관련한다”라고 주장한다 (Laibman, 1997: 32).

13) 여기에서 제시되는 이윤율에 관한 Laibman의 모형은 순수경쟁상태 하에 집계치가 잘 정의되는 일부분 경제를 상정하고 있다. 또한 원료 및 감가상각이 배제된 “순수고정자본”모형을 채택하고 있고 총노동 L 은 “과거” 혹은 “간접”노동이 존재하지 않는 동질적인 현재노동으로 국민소득 Y 의 총노동량을 체현하고 있다. 따라서 L/Y 는 산출물단위당 체현된 노동량, 혹은 단위노동가치(λ)가 된다. 한편, K 는 이 경제의 단위산출물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 가치는

자본주의적 발전의 장기적 추이에 대한 결정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 이 이윤율공식은 그러나 자본구성과 이윤분배율의 장기추세에 대한 비결정성(indeterminancy) 문제 때문에 수많은 논쟁을 낳았다. 이 문제에 정면으로 도전하면서 Laibman은 자본구성의 동학의 중요성을 강조한다.¹⁴⁾ 기술중립적 자본구성변화의 이론적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지만 Laibman은 맑스의 논의(『자본』 1권, 25장)와 Bronfenbrenner의 논의¹⁵⁾를 따라 명시적으로 자본구성 증가를 채택한다. 이제 노동절약적 기술혁신, 즉 자본구성증가의 조건 하에서 Laibman은 복잡한 수식 및 엄밀한 논증을 통해 맑스의 ‘특별잉여가치’에 해당하는 ‘혁신이윤율’(the conjunctural profit-rate)을 확보하기 위한 개별자본가의 미시합리적인 행위가 어떻게 자본구성과 이윤분배율 간의 역의 관계로 도출되는지 보여준다.¹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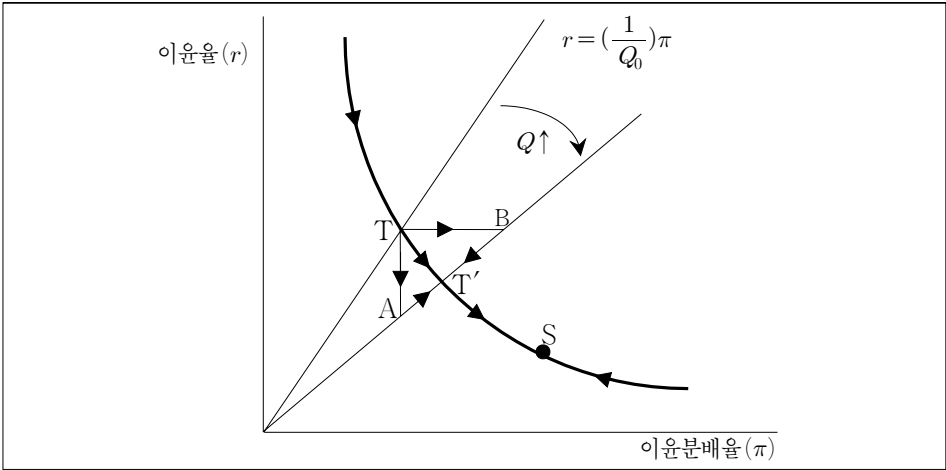
이제 이러한 관계를 이윤분배율과 이윤율의 공간 속에 표현하면 아래와 같은 그림이 도출된다. 그림에서 T 점은 개별자본가의 미시합리적인 혁신이윤율 극대화조건을 충족시키는 이윤율과 이윤분배율의 한 조합점이다. Laibman은 따라서 이를 ‘일치점’(consistent point)으로 부른다. 이제 자본주의적 경쟁이 추동하는 역사적 경향성으로 자본구성의 고도화는 Q -반직선을 화살표처럼 우하방으로 이동시킨다. T 점에서 자본과 노동 간의 계급역관계가 균형을 달성하는 이윤분배율수준 하에 놓여 있다면 자본구성고도화는 \overline{TA} 방향으로 이동시킨다. 결국 A 점의 급격

$\lambda K = K(L/Y)$ 로 되고 현재노동단위당 자본가치, 즉 자본구성(composition of capital) $Q = \lambda K/L$ 는 $K(L/Y)/L$, 즉 K/Y 가 된다. 이처럼 전통적인 맑스 개념, 즉 “자본의 유기적 구성”과 구분하여 Q 를 “자본구성”으로 사용하고 이윤율의 분모에서 가변자본을 제외하는 개념적 이유에 대해서는 Laibman(1992: 12장; 1997: 3장)을 참조하라. 물론, 이윤율에 대한 경험추계와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적지 않은 문헌들은 식 (2)의 방식을 채용하고 있다. 예로 Duménil and Lévy(1993)과 정성진(2006)을 보라. 이 논문도 경험분석과 관련한 주요 개념에 대하여 이러한 흐름을 이어받고 있다는 점을 밝힌다.

- 14) Laibman(1992)은 기술혁신이 추동하는 자본구성변화의 내적 논리에 의한 개발이 소홀했음을 지적하고 이러한 맥락에서 조절이론 및 사회적 축적구조의 시기구분, 웨이스코프 및 글린 등의 전후 이윤압박론을 비판적으로 평가한다.
- 15) Bronfenbrenner는 자본축적이 Kaldor 및 Robinson의 용법으로 볼 때 노동절약적 기술진보를 체화하고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자본축적과 기술진보의 결합이란 시간에 따라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증가함을 의미한다”(Bronfenbrenner, 1965: 218).
- 16) 여기서 이러한 관계가 어떻게 도출되는지에 대한 복잡한 논의를 서술할 필요는 없다고 보지만 어떻든 이 관계는 옳고 그름을 떠나 Laibman의 논의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이 $\pi - Q^{*opt}$ 관계(이윤분배율과 자본구성간의 역의 관계-인용자)는 다음장에서 우리의 관심이 놓여있는 자본축적경로에 관한 모형에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Laibman, 1997: 60).

한 이윤율하락은 ‘유동성위기’적 제약에 맞닥뜨리게 만든다는 것이다.

〈그림 1〉 자본구성고도와 일치경로



이제 A점에서와 같은 이윤율의 하락은 적정자본량에 대한 새로운 축소조정으로 이어지고 불황국면에서 노동수요를 감소시킨다. 노동공급증가율이 일정한 상태에서 노동수요의 감소는 맑스의 ‘산업예비군’을 증가시키고 그에 따라 노동의 힘이 약화되면서 이윤분배율은 상승한다. 이는 Laibman이 Bronfenbrenner의 논의를 따라 (1) 식에서처럼 이윤분배율과 실업률 간의 정비례적 관계를 따른다는 점을 의미한다. 결국 A점은 최종적으로 $\overrightarrow{AT'}$ 방향을 따라 이동하면서 일치점 T'점에서 새로운 균형을 형성한다.¹⁷⁾ 이와 같은 방식으로 T와 T'과 같은 우하향하는 일치점들의 궤적을 도출할 수 있게 되는데 Laibman은 이를 ‘일치경로’(consistent path)라고 부른다. 그런데 이 새로운 균형점 T'은 A점에 비해 이윤율의 일부 회복은 달성하지만 증가된 이윤분배율에 따라 새로운 위기적 제약, 즉 ‘실현위기’에 직면하도록 한다. 바로 이것이 자본축적이 강제하는 내재적 경향성으로서 근본적 딜레마

17) 위의 그림에서 자본구성도의 증가에 따른 또 다른 방면인 \overrightarrow{TB} 의 경로 역시 유사하게 설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노동의 힘이 약하여 자본구성고도에 따른 이윤율 하락 압박을 이윤분배율의 상승으로 저지하고 있다. 그러나 일치경로를 이탈한 B점과 같은 이윤율 하에선 균형자본축적률에 상응하는 노동공급률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여 노동시장 압박을 초래한다. 따라서 노동시장의 초과수요상태에서 임금상승과 함께 이윤분배율 및 이윤율이 하락하면서 새로운 일치경로상의 일치점 T'에 이른다. 물론 현실적인 운동은 일치경로를 중심으로 끊임없는 이탈과 복귀 등이 연속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Scylla-Charybdis) 인 것이다.

이상의 Laibman의 분석은 사실 높은 추상수준과 분석조건의 단순화 때문에 현실 분석에 그대로 적용하는 데는 작지 않은 난점들이 있다.¹⁸⁾ 다만, 자본주의적 발전의 내재적 경향으로서 자본구성의 상승은 이윤율 하락에 따른 유동성위기를 겪거나, 혹은 이윤분배율의 상승에 의해 유동성위기는 벗어나게 되지만 실현위기에 부딪치게 되는, 아니면 두 위기 모두가 드러나는 전면적 위기(general crisis)라는 딜레마에 빠진다는 구조적 모순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의미를 지닌다.

III. 한국자본축적과정과 이윤율의 동학

자본주의적 생산체제에서 이윤율은 핵심적인 범주이다. 왜냐하면 자본운동의 동력은 동질적 화폐공간에서 오로지 자본의 투하량 대비 회수량의 증대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전자본주의적 사회에서 생산의 목적이 사용가치라면 자본주의적 사회체제에서 그것이 교환가치인 것은 자본운동의 이러한 속성에서 비롯한다. 따라서 이윤율의 변동은 자본축적의 템포와 리듬을 집약적으로 표현한다. 리카도 등 고전학파의 많은 경제학자들이 자본주의적 생산체제의 장기전망과 관련하여 이윤율의 장기적 저하경향을 주요특징으로 지적하였던 것도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비롯한다. 한국자본주의의 역사적 발전과정에 대한 축적구조론적 접근도 이와 관련되어 있다.

2절에서 살펴본대로 이윤율의 향방은 노동과 자본 간의 계급적 관계를 반영하는 분배조건과 자본주의적 경쟁이 추동하는 무제한적 생산력의 발전이라는 생산조건, 두 조건의 역사적 동학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윤율의 동학을 야기하는 내재적 두 조건의 변화, 그리고 이로부터 비롯하는 축적위기의 형태변화를 중심으로 외환위기 전후 한국경제의 구조변화를 살펴보자. 우선 경험분석에 활용되는 주요 개념들과 범주들을 간단히 살펴본다.

한 경제의 실질산출물은 두 계급, 즉 노동자의 소득(임금 혹은 피용자보수)와 자본가의 소득(이윤 혹은 영업잉여)로 양분된다. 이는 $Y = W + P$ 로 표현된다. 여기

18) 여기서 우리는 그의 직관적 결론만 확인하지만 Laibman의 구체적 논의조건들을 실증적으로 검토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듯하다. 특히 Bronfenbrenner와 Laibman 모두 두 위기의 장애(barrier)에 대한 논의를 개발하고 있는데 이러한 장애에 대한 경험분석은 경기변동론적 분석 속에 체계적으로 통합될 수 있을 것이다.

서 W 와 P 는 각각 임금과 이윤이다. 따라서 이윤분배율 $\pi = P/Y$ 가 된다. 한편, 자본구성 Q 를 노동량으로 나누면 우리는 두 개의 하위지표를 도출할 수 있다. 하나는 물적자본과 노동량 간의 비율로 $k = K/L$, 즉 ‘자본의 기술적 구성’(TCC, The Technical Composition of Capital)이다. 이 k 는 생산의 기계화(mechanization)의 정도, 즉 자본집약도를 표현한다. 다른 하나는 $y = Y/L$ 로 총자본의 관점에서 포착한 사회적 노동생산성이다. 따라서 노동생산성의 역수 L/Y 는 거시집계적 가치관계라는 측면에서 보면 산출물 단위당 노동량을 표현하는 단위노동가치이다. 이제 단위노동가치를 λ 라 하면 $\lambda = L/Y = 1/y$ 이 성립하며 물적 자본의 가치는 λK 가 된다. 산노동플로우에 대한 이 가치의 비율은 자본구성, 즉 $Q = \lambda K/L$ 이 되고 이는 다시 $Q = \lambda K/L = (L/Y)(K/L) = K/Y = k/y$ 로 분해된다.¹⁹⁾

수량적 분석은 상대적으로 지표변화가 뚜렷하게 관측되는 제조업부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제조업부문의 총소득 혹은 총생산은 『국민계정』의 영업잉여와 피용자보수의 합으로 구한다. 총노동시간은 총취업자수를 이용하였으며 자본스톡은 표학길(2003)을 이용하였다.²⁰⁾ 이들의 자본스톡추계는 2003년까지만 되어 있어서 시기적 제한성이 있지만 우리는 여타 보완자료를 활용하여 2009년까지 관련 분석을 확장할 것이다.

한편, 우리는 이상의 경험분석 결과를 위기형태론적으로 포착하기 위해 Laibman의 설명이 제시한대로 이윤분배율과 이윤율의 공간 속에 표현하고자 한다. Laibman은 이 공간을 ‘일치경로’(consistent path)를 설명하기 위해서 도입한 것이지만 일치경로 개념이 갖는 고도의 추상성과 제한적 조건 때문에 이 용어사용의 제한성에 주의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윤율-이윤분배율 공간의 용어에 대한 마땅한 대안이 없고 Laibman의 위기형태에 대한 논의의 맥락을 살린다는 점에서 제한적으로 그의 용법을 따르고자 한다. 다만, 일치경로 개념의 추상성과 논리적 엄밀성을 구분하여 가능한 “역사적 일치경로”로 표현하여 용어의 경직성을 완화하고자 한다.

아래의 <그림 2>는 1970-2003년 간 제조업부문의 장기 역사적 일치경로를 나타낸다.²¹⁾ 이는 대수적으로는 $r \downarrow \rightarrow K^* \uparrow \rightarrow Q^* \uparrow \rightarrow \pi \downarrow$ 의 경로를 취한다고 볼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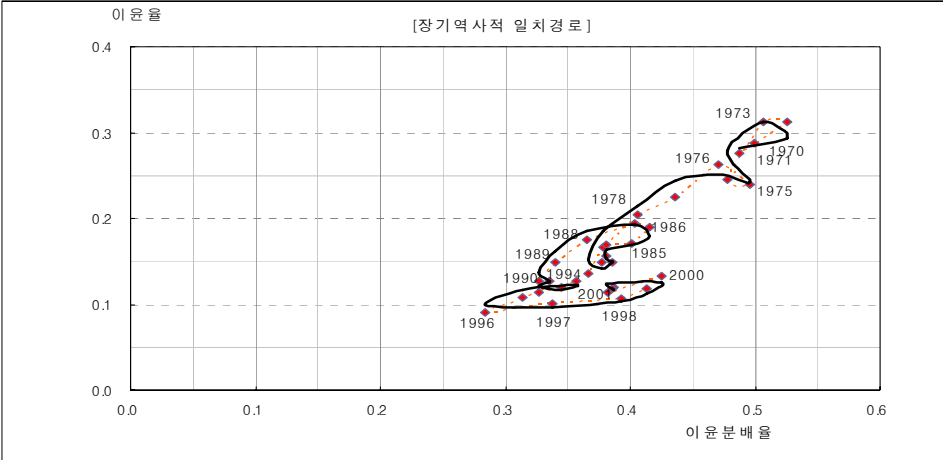
19) 이상의 주요범주들 및 모형설계와 관련해서는 앞의 주13)을 참조하라.

20) 여기에서 자본스톡(K)은 표학길(2003)의 제조업부문 경상가격 순자본스톡에 2003년까지 자료가 추가수록된 정성진(2006)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21) 우리나라의 결과에서 우선 눈에 띄는 것은 외환위기 이전까지 ‘일치경로’가 이론적으로 우하향

있다(단, 여기서 변수 X^* 는 증가율, 즉 $(\frac{\Delta X}{\Delta t})/X$ 이며 이하 동일하다). Laibman의 일치경로에 대한 논의에서도 언급했듯이 화살표 방향을 인과의 방향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 어쨌든 우리나라의 경우 외환위기 이전까지 높은 기대이윤율 하에서 왕성한 자본축적이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자본구성의 상승, 그리고 이윤분배율의 하락이라는 경로를 취하고 있다. 결국 외환위기 이전까지 장기적으로 이윤율은 급속하게 하락하면서 유동성위기형태에 노출되어 있지만 실현위기형태로부터는 상대적으로 벗어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무엇보다 이윤분배율의 하락, 즉 임금분배율의 상승 때문에 가능한 것인데 과거 고도성장기에 상대적으로 평등한 분배율을 지적해왔던 일반적 논의가 잘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2〉 제조업부문 장기 역사적 일치경로(1970-2003)



한다는 Laibman의 주장과 달리 장기적으로 좌하방의 진행방향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일치경로’가 좌하방의 모양을 띠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이를 위해 혁신이윤율 극대화조건 속에서 복잡하게 유도되는 Laibman의 일치경로 방정식을 보자:

$$r = \frac{1}{a} [G(1-\alpha)]^{-1/\alpha} w^{1/\alpha} - \frac{1}{aN} \quad (\text{Laibman, 1992: 141}).$$

이 식에서 볼 수 있듯이 일치경로를 결정하는 변수들은 자본축적률 a , 생산함수의 곡률 α , 사회제도적 측면의 총생산성 G , 노동공급 N , 임금률 w , 이윤율 r 로서 여섯 가지가 된다. 따라서 이들 변수들에 따라 경험적 일치경로는 매우 다양할 수 있는데 여기서의 결과도 이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실제 Laibman도 20세기, 특히 대공황 이후 국가의 역할 등 이윤분배율의 독립적 특성 때문에 ‘예외적으로’ 역사적 일치경로가 이론적 일치경로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Laibman, 1992: 253-254). 따라서 일치경로를 경험적으로 검출하기 위해서는 이들 변수들의 변동에 대한 별도의 엄밀한 분석을 요구한다.

한편, 외환위기 이후 보게 되는 일치경로의 변화는 매우 극적이다. 1996년을 저점으로 외환위기를 경험하면서 이윤분배율은 큰 폭으로 개선되는 반면 이윤율은 하락하지 않는다. 또한 낮은 이윤율 수준 하에서 자본축적의 에너지는 크게 떨어지고 자본구성도 하락하고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외환위기 전후 일치경로로 살펴본 이윤율-자본축적-이윤분배율의 향방은 아래와 같은 구조변화를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한다.

1) 외환위기 이전: $r \downarrow \rightarrow K^* \uparrow \rightarrow Q^* \uparrow \rightarrow \pi \downarrow$ (유동성위기구조 형태)

2) 외환위기 이후: $r \uparrow \rightarrow K^* \downarrow \rightarrow Q^* \downarrow \rightarrow \pi \uparrow$ (실현위기구조 형태)

물론 위와 같은 분류는 형태상의 역사적 유형화에 해당하는 것으로 Laibman의 일치경로와 같은 개념적 엄밀성을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IV. 유동성위기구조에서 실현위기구조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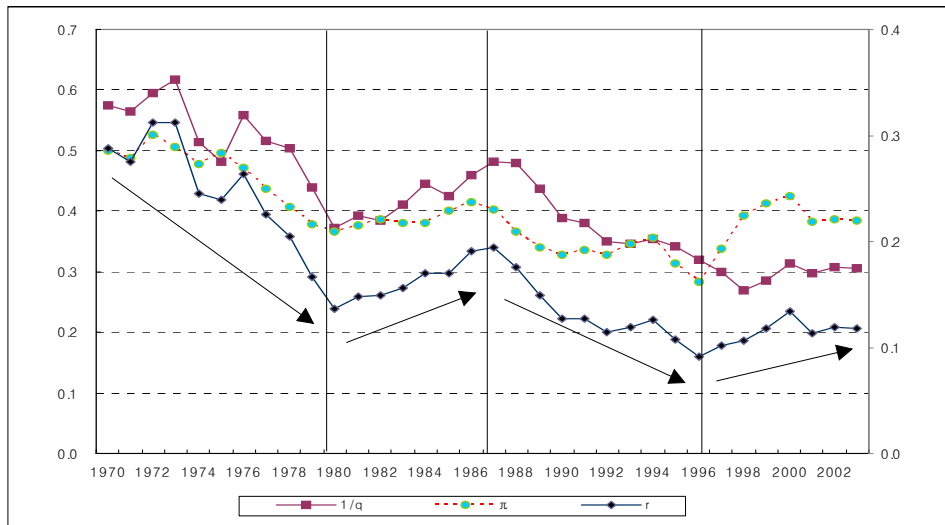
이제 앞의 3절에서 확인한 외환위기 전후 일치경로의 변화가 갖는 축적구조적 의미를 일치경로의 주요변수들, 즉 이윤율과 이윤율의 결정요소인 자본구성 및 이윤분배율의 변동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특히 우리는 이들 주요변수들의 변동을 통해 축적위기구조의 형태 변화라는 측면에서 외환위기 이전 유동성위기구조에서 위기 이후 실현위기구조로 변화하고 있음을 포착할 것이다.

1. 이윤율의 변화와 주요변동요인

우리나라의 역사적 일치경로에서 비록 이윤분배율의 방향은 Laibman이 주장하는 이론적 예상과 달랐지만 이윤율의 장기추세적 하락 추이는 확인되고 있다.

아래의 <그림 3>을 보자. 이윤율의 장기추이는 크게 이윤율이 대세 하락기에 놓여 있는 왕성한 축적시기와 조정의 국면인 두 시기로 나누어진다. 1970년대 중후반의 중화학공업화기와 1980년대 후반 이른바 3저호황국면에서 외환위기의 시기까지가 호황국면이었다면 1980년대 초중반 전두환정권 시기와 외환위기 이후 시기는 구조조정의 시기로서 이윤율의 하락이 저지되거나 상승되는 시기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윤율은 추세적으로 장기하강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그동안 왕성한 자본축적에 의한 고도성장기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²²⁾

〈그림 3〉 주요변수들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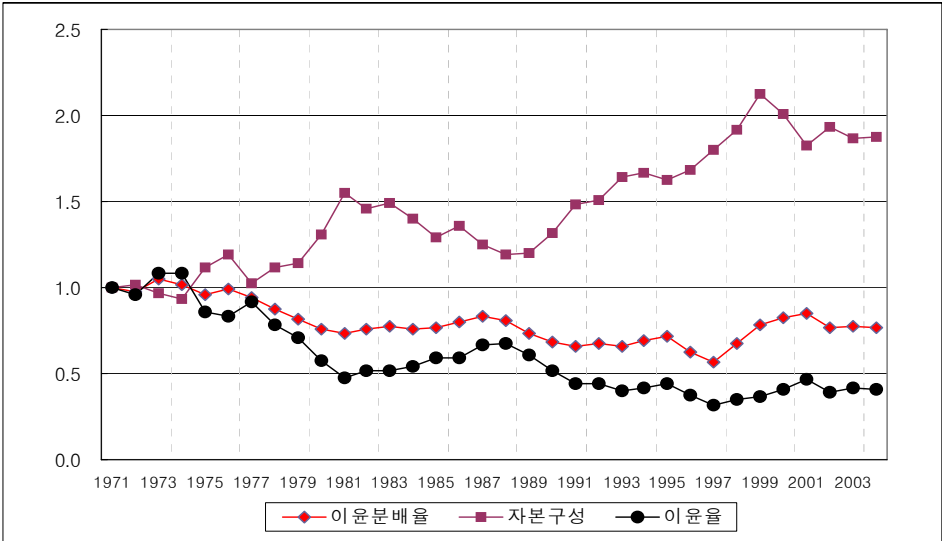


한편, 위의 〈그림 3〉에서 이윤율결정의 핵심변수인 자본구성의 역수(즉 자본생산성) 및 이윤분배율의 장기추이도 이윤율과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 가지 뚜렷한 점은 외환위기 이후 이윤분배율과 자본구성간의 역전 현상이다. 외환위기 이전 이윤분배율은 대체로 자본생산성을 하회하는데 외환위기 이후 큰 폭으로 상회한다. 이를 이윤율결정 주요변수들의 변동률의 추이를 통해 다시 살펴보자.

아래의 〈그림 4〉는 1971년을 기준으로 이윤분배율과 자본구성, 그리고 이윤율 변동률의 장기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3〉에서 확인한 사실을 좀더 뚜렷하게 관측할 수 있는데 즉 외환위기 이전까지 장기추세적 이윤율 변동의 주된 힘은 자본구성이다. 1980년대의 자본구성 하락은 특징적인데 이 힘은 이윤율을 끌어올리는 주요 힘으로 작용하고 있다. 1980년대 후반 이래 외환위기 직전까지 왕성하게 진행된 자본축적의 힘은 자본구성을 급격하게 끌어올리면서 이윤율 또한 하락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2) 이러한 이윤율의 장기적 저하경향은 매크시율 분석을 한 여러 문헌 뿐만 아니라 또한 주류경제학적 경험추계에서도 확인된다: “본 고의 분석결과 우리나라의 자본이윤율은 1976-98년 중 대체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 1976-80년 중 연평균 20%를 넘었던 전산업 자본이윤율이 1996-98년 중에는 8% 수준으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김대수·박형수, 2000: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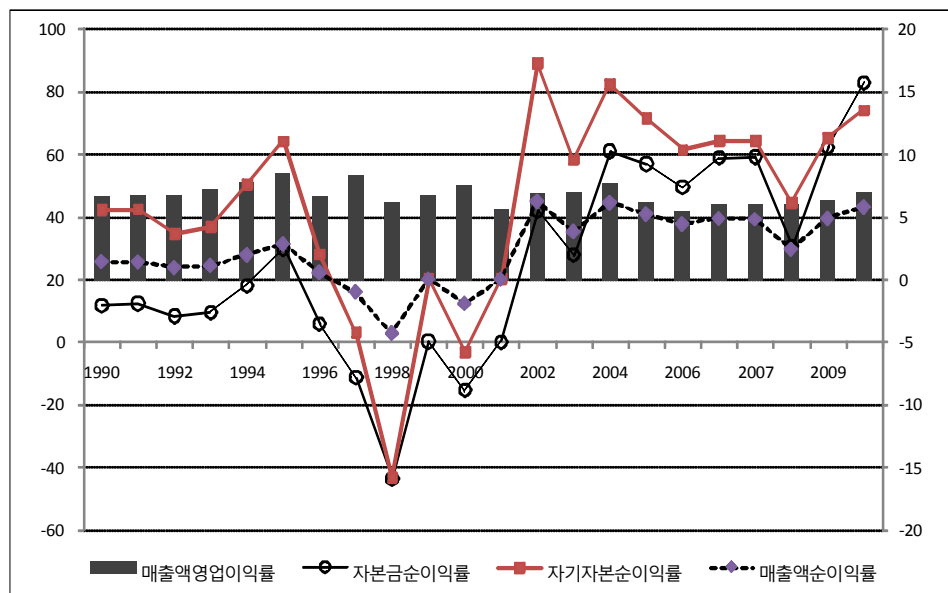
〈그림 4〉 주요변수들의 변동률의 추이



그러나 이러한 에너지는 외환위기와 함께 크게 약화되어 위기 이후에 자본구성은 하락 반전한 반면 이윤율은 상승 반전하고 있다. 위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역사적으로 이윤율 변동률의 상승반전이 있었던 시기는 전두환정권기와 외환위기 이후 두 번의 시기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이윤율상승을 추동하는 효과는 다르다. 전두환정권기의 경우 자본구성의 하락의 힘이 더 크고 이윤분배율은 횡보하고 있다. 반면 외환위기 이후의 시기에는 자본구성의 하락보다는 이윤분배율 변동률의 큰 폭의 상승반전효과가 더 크다. 외환위기 이후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의한 분배구조의 악화 효과가 크게 작용한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이러한 분석결과는 유사한 방식의 실증분석을 제시했던 여러 연구결과와 다르지 않다. 예로 정성진(2006)의 분석결과에서 1970-2003년 전체 기간 동안 이윤율 하락의 기여율 중 이윤분배율과 자본구성은 각각 14.5% 및 85.5%로 나타나 자본구성이 압도적인 역할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들 값들은 외환위기를 전후해서 보면 1987-1996년의 경우 각각 43.8%와 56.2%인 반면, 1996-2003의 경우 무려 107.5% 및 -7.5%로 나타나 상황은 완전히 반전된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이윤율이 2.2%로 정(+)의 값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윤율 회복의 압도적인 원천이 이윤분배율의 상승에 기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5〉 제조업부문 주요 수익성 지표 추이



자료: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DB.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효과는 수익성 중심의 경제구조를 유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를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 자료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자. 위의 〈그림 5〉에서 볼 수 있듯이 외환위기의 충격과 구조조정 효과가 극대화되었던 1998년을 최저점으로 이후 모든 이윤율 지표가 큰 폭으로 상승개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Laibman의 일치경로에서 느슨하게 확인되었던 이윤율하락의 저지가 『기업경영분석』 자료에서는 더욱 뚜렷하게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수익성의 급격한 개선은 외환위기 이전까지 장기추세적으로 하락해왔던 힘을 구조적으로 변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이윤율의 이러한 추세변화는 위기형태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가.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한국경제의 축적위기의 주요국면을 중심으로 이를 확인해보자. 아래의 표는 과거 우리나라 주요 축적위기국면의 주요지표들을 보여준다. 아래의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외환위기 이후 큰 폭의 위기를 맞았던 2008년의 경우 모든 지표들이 과거의 위기구조 때와 확연히 다르다. 외환위기시에는 급격한 자본축적과 그에 따른 자본생산성의 빠른 하락, 즉 자본구성성의 상승과 동시에 임금몫의 급격한 상승을 주요인으로 이윤율의 급격한 하락을 초래하는 유동성위기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유동성위기적 형태는 한국의 고도성장과정에서 이루어졌던 막대한 수입 자본재의 도입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본축적을 주도했던 재벌체제는 재벌대기업의 문어발식 다각화 및 높은 부채비율에 따른 재무적 취약성과 낮은 수익성에 의해 외부의 충격에 쉽게 유동성위기로 전이되는 구조를 지니고 있었다. 실제 1997년에 제조업부문 30대 재벌의 평균부채비율은 507%에 이르렀으며 이중 2개 그룹은 자본잠식상태에, 그리고 16개 그룹은 손실을 보았다(조성욱, 2000).

〈표 1〉 외환위기 전후 경제위기국면 지표

구 분	1971	1972	...	1979	1980	...	1997	1998	...	2008	2009
부채비율	394.2	313.4	...	377.1	487.9	...	396.3	303.0	...	129.8	104.2
자기자본비율	20.2	24.2	...	21.0	17.0	...	20.2	24.8	...	43.5	49.0
차입금의존도	55.9	51.4	...	48.4	49.3	...	54.2	50.8	...	28.3	25.7
매출액경상이익률	1.2	3.9	...	2.7	-0.18	...	-0.3	-1.8	...	5.0	7.3
이자보상비율	90.8	135.3	...	125.0	98.5	...	129.1	68.3	...	330.8	469.1
금융비용부담률	9.9	7.1	...	5.9	7.4	...	6.4	9.0	...	1.51	1.6

자료: 한국은행 데이터베이스(단, 2009년은 3/4분기임). 단, 여기의 지표는 전산업이다. 또한 매출액 경상이익률의 경우 2008년과 2009년은 매출액영업이익률이다.

그러나 미국발 금융위기로 큰 폭의 충격을 겪었던 2008-09년 동안 재무지표는 매우 안정적이다. 기업들의 양호한 유동성 확보가 위기국면 하에서 기업들의 연쇄도산을 억제하는 힘으로 작용하였던 것이다. 실제 이 시기 동안 기업들의 연쇄도산 등과 같은 과거 형태의 모습은 관측되지 않았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축적에너지의 급격한 둔화가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외견상 경기변동이 안정적인 모습을 띤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예컨대 이재준(2009)은 1970년 이래 GDP성장률과 같은 거시 경제변수의 지속적 안정성을 지적하면서 특히 외환위기 이후의 안정성이 과거와 다른 패턴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한다. 경제성장률과 같은 거시변수의 변동성을 충격과 지속성으로 구분할 때 1970년대에 비해 1980-90년대의 변동성 감소는 충격과 지속성이 모두 감소하거나(1980년대) 지속성은 약간 증가했지만 충격이 현저하게 감소(1990년대)한 데 따른 것인 반면, 2000년대의 변동성 감소는 충격의 영향보다 지속성이 현저하게 감소한 때문이라는 것이다.²³⁾ 물론 이는 기업부문의 수익성 중

23)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급격한 거시경제적 지표의 변동성 감소를 안정성의 강화로 해석하는 데

심의 재무안정적 행태추구와 깊은 연관이 있을 것이다.

2. 자본구성변화율과 주요 변동요인

외환위기 이후 수익성 중심의 경제구조는 자본축적의 둔화, 즉 저투자와 저성장이라는 대가를 치렀다. 즉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위기 이전과 비교하여 현저히 둔화되었”으며 “투자율의 현저한 하락을 동반하였”는데 이는 “위기 이전의 경이적으로 높고 지속적이었던 투자율 및 자본축적과 대비되면서 흔히 ‘투자부진’이라는 용어로 지칭되었다”(한진희 편, 2007: 23; 강조는 원문). 자본축적은 자본구성의 변화에 깊게 연관되어 있는데 자본구성변화율의 움직임을 통해서 외환위기 이후 자본축적에너지의 약화가 갖는 의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이윤율의 변동추이에 대한 앞의 〈그림 4〉에서 알 수 있듯이 자본구성은 일부 기간 동안 주춤하는 시기들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추세적인 상승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구분해서 보면 특히 1980년대의 전두환 정권기와 외환위기 이후의 하락시기가 눈에 띈다. 이를 자본구성 및 주요 관련 변수의 변동률의 추이를 통해서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자. 자본구성의 변동률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Q^* = k^* - 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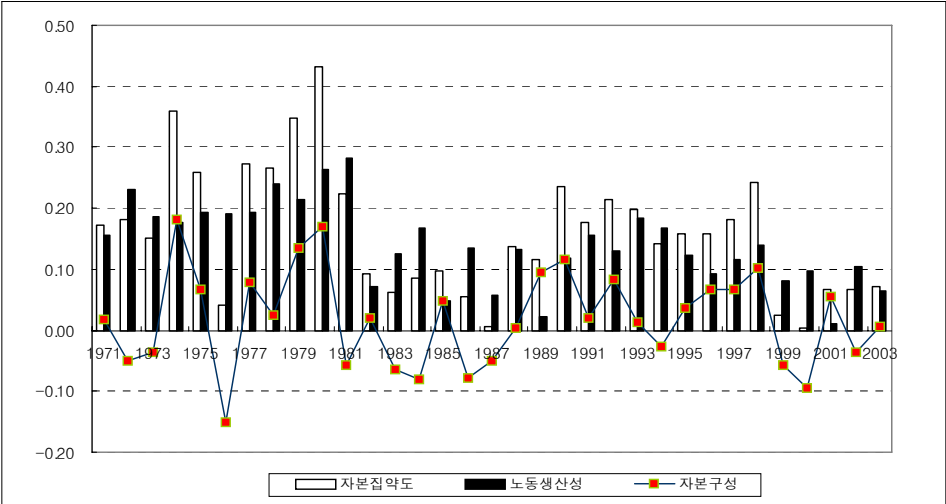
아래의 〈그림 6〉에서 알 수 있듯이 자본구성의 변동률은 1980년대 전두환 정권기에 뚜렷하게 부(-)의 값들을 보여주고 있다. 1980년대 초 전두환정권기에 중화학공업부문을 중심으로 추진된 강도 높은 자본의 구조조정과 노동압박에 의한 노동생산성 증가 효과가 크게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²⁴⁾ 그러나 이 시기에 자본축적과

부정적이다. 왜냐하면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는 외견상의 안정성 이면에 거시경제활동에너지의 급격한 약화가 초래하는 사회경제적 불균형의 높은 압력에 노출되어 실질적 불안정성이 크게 증폭되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실현위기에 대한 이후의 논의에서 이를 확인할 것이다.

- 24) 결국 이는 1980년대 전두환정권 집권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된 산업구조조정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예컨대 이영훈은 생산효율성, 즉 실제생산량이 생산함수에서 가정하는 최대 산출량에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라는 개념을 이용하여 효율성 추정을 하는데 그에 따르면, “생산효율성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1980년대에 가장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이영훈, 2001: 145). 즉, 1960-70년대에 우리나라의 생산효율성은 세계평균의 약 60% 수준이었으나 1980년대에는 약 90%로 올라 어느 지표로 보아도 1980년대의 높은 효율성과 기술진보를 관측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외환위기 이전까지 자본구성추이는 다시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는 1980년대의 산업구조조정성과가 1980년대 후반 3저회황 이후의

고용은 크게 위축되지 않았다. 앞의 <그림 4>와 아래의 <그림 6>에서 볼 수 있듯이 외환위기 이전까지 지속된 자본구성변동률의 추세적 상승은 외환위기를 경험하면서 하락반전하거나 주춤한다. 기간이 짧고 외환위기 직후 기저효과에 의한 큰 폭의 경기변동에 따라 추세적 판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지만 외환위기 이후 자본축적의 지속적 둔화현상은 자본구성변동률의 추이에도 반영되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림 6> 자본구성 및 주요변수들의 변동률의 추이



자본스톡추계에 기초한 아래의 분석(표학길 외, 2007)은 이에 대한 근거를 제공해준다. 아래의 <표 2>는 외환위기 전후 자본구성의 변동을 확인하기에 용이하게 시기구분되어 있다. 아래의 표에서 우리의 자본구성에 해당하는 자본계수는 외환위기 이전 4-5 수준에서 외환위기 이후 1.93으로 대폭 하락하고 있다. 자본생산성이 크게 개선된 셈인데 이러한 개선은 자본집약도가 큰 폭으로 하락한 데 따른 것임을 알 수 있다. 자본집약도에 해당하는 자본-노동비율(K/N)은 위기 이전 각각 8.06과 10.0에서 위기 이후 5.0으로 크게 하락한 반면 노동생산성은 같은 기간 3.93 및 5.11에서 3.16으로 크게 하락하지 않았다.²⁵⁾

대규모 자본축적에 의해 상쇄되면서 비효율성이 증대된 효과로 볼 수 있다.
25) 자본구성의 이러한 분해는 다음과 같은 공식의 변형 속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표 2〉 한국의 15-69세 1인당 GDP의 성장회계(전산업)

시기	1인당 GDP성장률 (<i>y</i>)	성장요인					
		총요소 생산성 (<i>A</i>)	자본계수 (<i>x = K/ Y</i>)	평균근로 시간 (<i>h</i>)	고용률 (<i>e</i>)	자본-노동비 율 (<i>K/L</i>)	자본장비도 (<i>K/ E</i>)
1970-83	3.89	-1.09	4.09	0.42	1.83	8.06	6.19
1984-97	5.00	-0.05	4.78	-0.75	1.90	10.00	7.99
1998-05	3.14	0.49	1.93	-0.14	5.00	5.00	4.54
1970-05	4.17	-0.34	3.87	-0.18	8.14	8.14	6.53

출처: 표학길 외(2007: 171).

결국 외환위기 이후 자본구성의 하락은 주로 자본축적의 급격한 둔화에서 비롯하고 있음을 엿보게 하는데 이는 경제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성장둔화에 대한 다른 연구결과들에서도 확인된다. 예컨대 한진희·신석하(2007)는 성장회계 결과 외환위기 이후 성장둔화가 주로 요소투입 증가에 기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질적 변화를 감안한 자본증가율과 노동증가율이 1991-95년 기간에는 각각 11.6% 및 4.2%였으나 2001-05년 기간에는 각각 4.7%와 1.3%로 하락하였음을 보이고 있다. 그리하여 1991-97년 및 2001-06년간 동안 “두 기간 사이의 노동자 일인당 GDP증가율 둔화(-1.7%)는 노동자 일인당 자본축적 속도의 하락에 의해서 전부 설명이 되고도 남는다”고 주장한다(한진희·신석하, 2007: 45-46). 참고로 논란의 소지가 많은 총요소생산성의 경우 기존의 연구결과(Kim and Lau, 1994; krugman, 1994)대로 외환위기 이전에는 비중도 작고 부(-)의 값을 보인 반면 외환위기 이후에는 위의 표와 한진희·신석하(2007)의 분석 모두에서 증가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수익성 중심의 전면적인 사회경제적 구조개편의 한 단면을 엿보게 한다.

3. 이윤분배율의 상승과 실현위기적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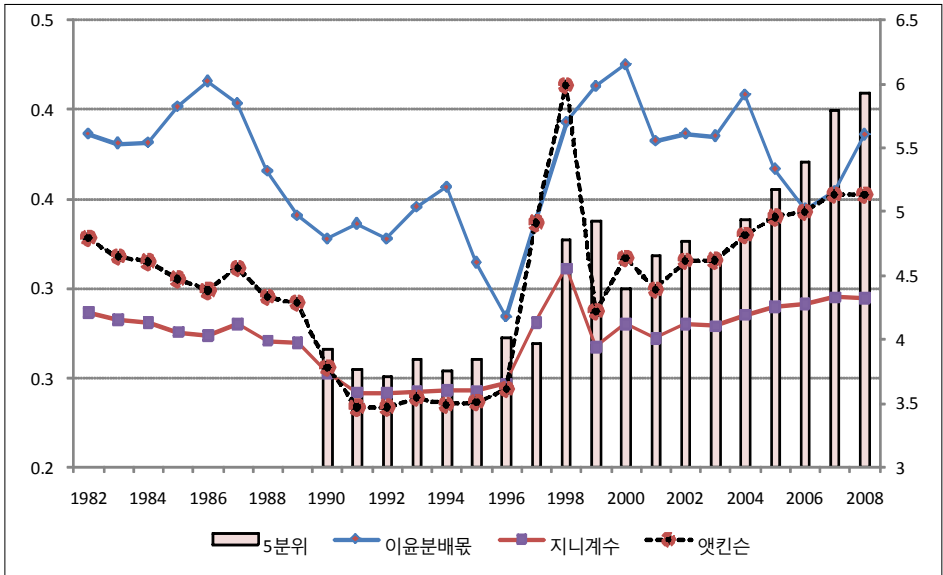
외환위기 이후 강도높게 진행된 구조조정은 특히 고용부문에 가혹하게 영향을 미쳤다. 축적론적 관점에서 보면 가혹한 고용조정은 자본의 효율화를 통한 생산성의 증대, 즉 자본구성의 저하와 임금분배몫의 억제로 나타난다. 특히 일본식 종신고

$$Q^*=(\frac{K}{N})^*-(\frac{Y}{N})^*.$$

용, 연공급과 같은 고용 및 임금형태의 심대한 변형은 비정규직의 급증 등 간접고용의 확대와 함께 고용형태간 임금격차를 크게 증대시켰다. 직관적으로 볼 때 외환위기 이후 고용 및 임금의 사회적 제도적 형태가 갖는 과거의 고정비용적 성격이 고전적 의미에서 ‘가변비용’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대로 외환위기 이후 이윤율의 상승추세는 결국 외환위기 이후 이른바 ‘신자유주의로의 전환’과 같은 분배구조의 악화에 따른 이윤분배율의 상승에 크게 힘입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래의 <그림 7>은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제조업의 부가가치로 포착한 이윤분배율의 추이와 통계청 도시가계연보 DB에서 포착한 5분위배율, 그리고 성명재·박기백(2009)의 지니계수 및 앳킨슨 지수로 본 분배지표의 변화를 보여준다. 앞절에서 지적한 외환위기 이후 이윤분배율의 반등이 사회전체의 분배지표에서 보다 뚜렷하게 관측되고 있다. 특히 5분위지수에서 상위 및 하위계층 간의 소득격차의 확대가 뚜렷하여 외환위기 이후 주요담론으로 논의되어 온 ‘사회양극화’가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

<그림 7> 외환위기 전후 주요 분배지표의 변화 추이



출처: 성명재·박기백(2009); 통계청 DB; 한국은행 DB.

이처럼 외환위기 이후 이윤분배율의 급격한 상승은 사회전체 차원의 분배지표를

악화시켰지만 자본의 입장에서는 악화된 수익성을 회복시켰다. 그러나 자본축적론적 관점에서 보면 이는 대중구매력의 약화라는 제약을 부과하면서 실현위기적 압박을 증가시키는 것이기도 하였다. 외환위기 이후 내수부문의 활력에 관한 광범위한 사회적 담론이 지속된 것도 이러한 상황변화와 무관하지 않다.²⁶⁾ 1975년부터 2009년까지 산업연관표에서 포착된 총수요구성비중의 추이를 통해서 이를 살펴보자.

〈표 3〉 총수요 구성비중의 추이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09
소비	60.2	57.7	51.6	48.6	47.8	49.3	49.4	47.8
민간	51.0	47.2	44.1	40.9	40.3	42.0	39.3	36.9
정부	9.2	10.5	7.5	7.7	7.5	7.3	10.1	10.9
투자	20.6	19.9	22.7	28.9	29.6	22.4	21.6	17.9
수출	19.2	22.4	25.7	22.5	22.6	28.2	29.0	34.2

자료: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각년도.

우선 소비부문을 살펴보자. 위의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외환위기 이전, 특히 1990년까지 소비 비중은 가파르게 감소하다 그 이후는 48-49%수준에서 20여 년 동안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외견상 외환위기 전후 시기 내수부문의 한 축인 소비부문은 상대적인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소비구성 면에서 핵심영역인 민간부문은 2000년에 42.0%를 차지하여 1990년의 40.9% 및 1995년의 40.3%보다도 오히려 더 높다. 그러나 이 당시 높은 소비지출은 외환위기 충격 직후의 기저효과와 당시 정부의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일시적 경기부양 효과가 크게 작용했던 것에 따른 것이다.²⁷⁾ 실제 2003년 끝이어서 닥친 카드 사태로 이 힘은 더 이상 유지되지 못했다. 카드사태의 충격 직후였던 2005년의 민

26) 남상호·임병인(2008)은 1995-2005년까지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통상적인 분석 결과대로 소득불평등 및 소득양극화의 진행을 확인하지만 흥미롭게도 소비지출의 불평등 상태는 개선되고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소비지출의 불평등지수와 구매력과의 관계 등이 심층적으로 밝혀져야 되겠지만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분석기간 동안 민간소비 비중은 큰 변동을 보이지 않았던 것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어쨌든 2009년 민간소비 비중의 큰 폭 하락에서 볼 수 있듯이 민간부문의 구매력의 약화라는 현상은 부정하기 어렵다.

27) “1999-2001년의 3년 동안 신용카드 이용금액은 연평균 120%, 현금서비스 이용액은 연평균 136%씩 급증”했으며 “2002년 개인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신용잔액 비율이 15.9%로 상승하여 미국의 8.9% 수준을 크게 상회”하였다(정영식 외, 2010: 35-36).

간소비지출은 39.3%로 사상 처음으로 40%를 밑돌았으며 미국발 금융위기의 충격과 함께 2009년에는 더욱 악화되어 사상최저인 36.9%로 급락하였다. 민간소비부분의 급격한 비중 축소를 저지하기 위해 2005년 정부지출은 1980년 이래 25년 만에 두자리수인 10.1%를, 그리고 2009년의 경우 10.9%로 사상최고치를 기록하였다.²⁸⁾

내수부분의 또 다른 한 축인 투자지출의 경우 사태는 훨씬 심각하다. 외환위기 직전인 1995년 투자부분의 비중은 29.6%로 왕성한 축적에너지를 보여주었지만 외환위기 이후 꾸준히 하락하여 2009년의 경우 역대 사상 최저수준인 17.9%로 급락하였다. 이러한 충격 때문에 주류경제학적 접근방법론에 의한 국책연구기관 KDI의 한 연구보고서는 외환위기 이후 “성장둔화의 주요근인으로 나타난 자본축적의 둔화”에 대해 아예 “투자위축” 혹은 ‘투자부진’으로 이해하는 것보다는 위기 이전 경이적인 자본축적의 종료로 이해하는 것이 더 타당할 듯하다”(한진희 편, 2007: 4; 강조는 원문) 라고까지 말한다. 따라서 총수요를 견인할 수 있는 내수부분의 여력은 계속 약화되어갔다.

이제 남아있는 유일한 출구는 수출부분 뿐이었다. 실제 수출부분의 비중은 1995년 22.6%에서 외환위기 이후 갈수록 높아져 2009년의 경우 34.2%로 역대 사상 최고치에 도달한다. 이는 민간지출 36.9%에 근접하는 것으로 외환위기 이전까지 민간소비지출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던 수출 비중이 이처럼 높아진 것은 한국경제의 외부의존성을 크게 심화시켰을 것이다. 한국은행 국민계정 통계로도 무역의존도는 2011년 1분기에 97.4%로 집계되어 10여 년 전의 50-60%수준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IMF와 OECD 등 주요 국제기구들이 공동으로 작성하는 “G20 주요 경제지표”상으로 보더라도 수출 및 수입 비중은 모두 1위를 차지하여 전체 1위에 올라 있다. 결국 실현위기적 관점에서 외환위기 이후 임금인상억제 및 임금격차확대 등에 따른 분배지표 악화와 내수의 억압 속에서 한국의 자본이 국내적 실현위기를 국제적 차원에서 돌파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높은 무역의존도가 어떤 경제적 의미를 갖는지 체계적으로 분석되어야 하겠지만 무엇보다 대외부분의 충격에 취약한 구조를 갖는다는 점과 과도한 외환보유

28) 기획재정부의 자료를 토대로 언론에 보도된 우리나라 국가채무 추이는 1997년 60.3조(11.9%), 2002년 133.6조(18.5%), 2007년 298.8조(30.7%), 2010년 392.8조(33.5%)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한겨레신문』, 2011. 8. 2. 3면. 괄호안의 값은 GDP 대비임).

고가 초래하는 환율하락 및 과잉유동성의 흡수문제 등과 같은 거시경제적 불균형의 압력을 증대시킬 것은 명확하다. 특히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이 해소되지 않고 있고 그리스 등 유럽 일부 국가를 중심으로 번지고 있는 재정위기가 미국을 포함하여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라 중국이 긴축 방향을 보이고 있는 움직임 등은 우리나라의 수출지형을 더욱 협애하게 만들고 있다. 국제적 수준에서 돌파해 온 국내적 실현위기가 국제적 수준의 실현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정부부문의 지출 역시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해 온 정부부채의 압력으로 약화되고 있다. 총체적으로 보면 실현위기적 압력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V. 결 론

1997년 발생한 IMF외환금융위기는 과거 고도성장모형을 체계적으로 해체하였다. 왕성한 자본축적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고도성장체제는 위기 이후 축적에너지의 급격한 약화와 함께 더이상 유지되지 못했다. 생산을 둘러싼 사회적 관계 역시 큰 변형을 겪었다. 이 때문에 외환위기 이후 한국사회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들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사회경제적 체계의 특성에 대한 설명은 그다지 성공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축적구조변화에 대한 역사적 분석이 결합되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 우리는 외환위기 전후의 축적구조변화를 역사적으로 대비시키는 접근을 시도하였다. 특히 자본축적의 템포와 리듬을 결정하는 이윤율과 그 결정변수인 자본구성 및 이윤분배율을 중심으로 축적구조의 변화를 체계적으로 연관시키고자 하였다. 우리는 이를 유동성위기와 실현위기라는 축적위기형태를 중심으로 포착하였다. 자본주의적 상품관계에서 사회적 총생산물의 창조와 부문 간 분배 조건이 그 생산물가치의 완전한 실현이라는 조건에 상응해야 한다는 관점이 놓여 있다.

우선 축적위기형태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점을 고려하여 이론사적으로 유동성위기와 실현위기에 대한 단초를 제공하였던 Sweezy에서부터 이후 Bronfenbrenner와 Laibman으로 이어진 논의를 소개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외환위기 전후 우리나라 축적구조의 변화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특히 Laibman의 ‘일치경로’

에 관한 개념을 빌어 장기역사적 일치경로를 살펴보면서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역사적 경로가 좌하방(↙)에서 우측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였다. 이를 통해 외환위기 이전 이윤율의 급격한 하락과 이윤분배율의 하락이라는 축적구조에서 외환위기 이후 이윤분배율의 급격한 상승과 수익성 상승이라는 구조로 변화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이를 위기형태에 대한 논의와 연관하여 우리는 외환위기 이전 유동성위기적 축적구조에서 실현위기적 구조로 이전하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특히 외환위기 이전 주요 경제위기국면, 즉 1971년, 1979년, 1997-98년과 글로벌 금융위기 국면이었던 2008-09년에 대해 부채비율 등 구체적인 유동성지표 비율의 비교를 통해 이러한 변화를 확인하였다.

한편 외환위기 이후 혹독한 구조조정과 함께 사회전체에 수익성 중심의 논리가 강하게 수용되면서 자본축적의 급격한 둔화, 그리고 이윤분배율의 상승, 즉 사회전체 분배구조의 장기지속적 악화를 관찰하였다. 우리는 이를 사회적 생산물에 대한 가치실현적 관점에서 심각한 실현애로를 초래하면서 실현위기적 구조로 위기형태를 변화시키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실현위기의 애로를 타개하기 위한 신용카드 사용 등의 내수부양 노력들이 여의치 않자 이후 한국경제는 외부, 즉 수출과 정부지출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결과 더 이상 내수부문에 의한 유효수요의 힘이 뒷받침되지 않는 극단적인 수출의존도와 가파른 정부지출의 증가를 초래하면서 실현위기적 압력을 더욱 높이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거시경제구조적 관점에서 이러한 상황은 재생산메커니즘의 불균형의 압력을 심각하게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

■ 참 고 문 헌

1.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엮음, 『한국자본주의의 축적체제 변화: 1997~2003』, 한울아카데미, 2006.

(Translated in English) Gyeongsang Univ. Social Science Research Institute(eds.), *Changes of Accumulation Regime of Korean Capitalism: 1997-2003*, Hanul Academy,

2006.

2. 김대수 · 박형수, “우리나라의 자본이윤율 분석,” 『조사통계월보』, 6월호, 한국은행, 2000.
(Translated in English) Kim, D. and Park, H., “The Analysis of Korean Profit Rate of Capital,” *Monthly Bulletin*, June, Bank of Korea, 2000.
3. 김상조, “경제위기 이후 한국의 재벌개혁 · 금융개혁의 현황 및 과제,” 『아세아연구』, 제48권, 3호, 2005, pp. 7-42.
(Translated in English) Kim, S., “Changes of Corporate Governance and Financial System in Korea after the 1997 Crisis,” *The Journal of Asiatic Studies*, Vol. 48, No. 3, 2005, pp. 7-42.
4. 김형기, “1980년대 한국자본주의,” 『경제학연구』, 제44집, 제4호, 1996, pp. 253-285.
(Translated in English) Kim, H., “Capitalism of Korea in 1980s,” *Kyong Je Hak Yon Gu*, Vol. , 44, No. 4, 1996, pp. 253-285.
5. 남상호 · 임병인, “소득 · 소비 분배구조 추이 및 양극화 분석,” 『경제학연구』, 제56집, 제1호, pp. 5-37.
(Translated in English) Nam, S. and B. Lim, “A Study on the Trend of Inequality and Polarization in Income and Consumption in Korea: 1995-2005,” *Kyong Je Hak Yon Gu*, Vol. 56, No. 1, pp. 5-37.
6. 서울대학교 국제금융연구센터, 『외환위기 5년: 세계 석학들의 한국경제 진단』, 2002.
(Translated in English) Seoul National Univ. Research Center for International Finance, *Currency Crisis 5 Years: Diagnoses of Korean Economy from the World's Greatest Scholars*, 2002.
7. 성명재 · 박기백, “인구구조 변화가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 『경제학연구』, 제57집, 제4호, 2009, pp. 219-247.
(Translated in English) Sung, M., and K. Park, “Effects of Demographic Changes on Income Inequality in Korea,” *Kyong Je Hak Yon Gu*, Vol. 57, NO. 4, 2009, pp. 219-247.
8. 유태환 외, 『양극화 시대의 한국경제: 반성과 모색』, 후마니타스, 2008.
(Translated in English) You, T., et. al., *Korean Economy of Polarization Times: Retrospect and Grope*, Humanitas, 2008.
9. 이영훈, “한국경제의 생산효율성과 성장능력,” 조장욱 외, 『한국경제 성장의 한계와 가능성』, 한국경제연구원, 2001.
(Translated in English) Lee, Y., “Production Efficiency and Growth Capacity of Korean Economy,” Cho J., et. al, *Limits and Possibilities of Korean Economic Growth*, KERI, 2001.
10. 이재준, “한국 경기변동의 특징 및 안정성에 대한 연구,” 『한국개발연구』, 제31권, 제2호(통권 제105호), 2009, pp. 47-85.
(Translated in English) Lee, J., “Changes in the Business Cycle of the Korean Economy: Evidence and Explanations,” *Journal of Economic Policy*, Vol. 31, No. 2, 2009, pp. 47-85.
11. 정성진, “한국자본주의 축적의 장기 추세와 위기: 1970-2003,”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위임, 『한국자본주의의 축적체제 변화: 1997-2003』, 한울아카데미, 2006.

- (Translated in English) Jeong, S., "Long-Period Trend and Crisis of Korean Capitalist Accumulation: 1970-2003," Gyeongsang Univ. Social Science Research Institute(eds.), *Changes of Accumulation Regime of Korean Capitalism: 1997-2003*, Hanul Academy, 2006.
12. 정영식 외, "반복되는 한국 금융불안, 그 진단과 해법," 삼성경제연구소 연구보고서, 2010.
(Translated in English) Jeong Y., et. al., "Recurrent Financial Stress in Korea," SERI Working Paper, 2010.
13. 조성욱, "재벌의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분석: 주식시장의 평가를 중심으로," KDI정책포럼 2000-03, 152호, 한국개발연구원, 2000.
(Translated in English) Cho, S., "Analysis for Corporate Governance Improvement of Korea in Terms of Evaluation of Stock Market," *KDI Policy Forum*, Vol. 152(2000-03), KDI, 2000.
14. 조영철, 『금융세계화와 한국경제의 진로: 민주적 시장경제의 길』, 후마니타스, 2007.
(Translated in English) Cho, Y., *Financial Globalisation and Paths of Korean Economy: Road for Democratic Market Economy*, Humanitas, 2007.
15. 조하현 · 황선웅, "한국 거시경제 시계열의 구조변화와 충격의 지속성에 대한 연구," 『경제학연구』, 제55집, 제3호, 2007, pp. 85-117.
(Translated in English) Jo, H. and S. Hwang, "Structural Breaks and Shock Persistence in the Korean Macroeconomic Time Series," *Kyong Je Hak Yon Gu*, Vol. 55, No. 3, 2007, pp. 85-117.
16. 표학길, "한국의 산업별 · 자산별 자본스톡축계(1953-2000)," 『한국경제의 분석』, 제9권, 제1호, 2003, pp. 203-282.
(Translated in English) Pyo, H., "Estimates of Capital Stock by Industries and Types of Goods in Korea(1953-2000)," *Journal of Korean Economic Analysis*, Vol. 9, No. 1, 2003, pp. 203-282.
17. 표학길 · 정선영 · 조근삼, "한국의 총고정자본형성, 순자본스톡 및 자본계수 추계: 11개 자산-72부문(1970~2005)," 『한국경제의 분석』, 제13권, 제3호, 2007, pp. 137-186.
(Translated in English) Pyo, H., S. Jung and G. Cho, "Estimates of Fross Fixed Capital Formation, Net Capital Stock and Capital Intensity in Korea: 11 Assets by 72 Sectors(1970-2005)," *Journal of Korean Economic Analysis*, Vol. 13, No. 3, 2007, pp. 137-186.
18. 한진희 편, 『경제위기 이후 한국의 경제성장: 평가 및 시사점』, KDI 연구보고서, 2007.
(Translated in English) Hahn, C., eds., *Economic Growth of Korea after the Financial Crisis: Evaluation and Implications*, KDI Working Papers, 2007.
19. 한진희 · 신석하, "경제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성장둔화에 대한 실증적 평가," 한진희 편, 『경제위기 이후 한국의 경제성장: 평가 및 시사점』, KDI 연구보고서, 2007.
(Translated in English) Hahn, C. and S. Shin, "Positive Evaluation of the Slowdown in Economic Growth of Korea after the Financial Crisis," Hahn, C., eds., *Economic Growth of Korea after the Financial Crisis: Evaluation and Implications*, KDI Working Papers, 2007.
20. Aglietta, M. (tr. by Fernbach, D.), *A Theory of Capitalist Regulation: The US*

Experiece, NLB, 1979(성낙선 외 역, 『자본주의 조절이론』, 한길사, 1994).

21. Bronfenbrenner, M., "Das Kapital for the Modern Man," *Science and Society*, 29(4), 1965, pp.419-438. in Horowitz, D. (eds.), *Marx and Modern Economics*, Monthly Review Press, 1968, pp.205-226.
22. Duménil G. and Lévy, *The Economics of the Profit Rate: Competition, Crises and Historical Tendencies in Capitalism*, Edward Elgar, 1993.
23. Duménil, G. and Lévy, D., *Économie Marxiste du Capitalisme*, La Découverte, 2003 (김덕민 역, 『현대마르크스주의 경제학』, 그린비, 2009).
24. Fine, B. and Saad-Filho, A., *Marx's Capital*, Pluto Press, 2004(박관석 역, 『마르크스의 자본론』, 책갈피, 2006).
25. Harris, D.J., "On Marx's Scheme of Reproduction and Accumulatio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80(3), May-June, 1972, pp.505-522.
26. Jacoby, R., "The Politics of the Crisis Theory: Toward the Critique of Automatic Marxism II," *Telos*, 23(Spring), 1975, pp. 3-22.
27. Kim Jong-il and L. J. Lau, "The Sources of Economic Growth of the East Asian Newly Industrialized Countries," *Journal of the Japanese and International Economies*, vol. 8, 1994, pp. 235-271.
28. Krugman, P., "The Myth of Asia's Miracle," *Foreign Affaires*, 73(6), 1994, pp. 62-78.
29. Laibman, D., *Value, Technical Change and Crisis: Explorations in Marxist Economic Theory*, M. E. Sharpe, 1992.
30. Laibman, D., *Capitalist Macrodynamics: A Systematic Introduction*, Mcmillan Press Ltd., 1997.
31. Marx, K., *Capital*, Vol. 1, 2, Penguin Books Ltd., 1976[1978] (김수행 역, 『자본론』, 비봉출판사, 1995).
32. Perelman, M., "Marx, Devalorisation, and the Theory of Value," *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 23, 1999, pp. 719-728.
33. Sweezy, P., *The Theory of Capitalist Development*, Monthly Review Press, (1956<1. t edn 1942>).
34. Trigg, A.B., *Marxian Reproduction Schema: Money and Aggregate Demand in a Capitalist Economy*, Routledge, 2006.

Change of Capital Accumulation Crisis Forms Before and After the Currency Crisis: From Liquidity to Realization

Deok-Jae Lee*

Abstract

Korea's traditional high growth regime led by massive capital accumulation was systematically dismantled much to the shock of the currency crisis in 1997. After the crisis the energy of capital accumulation became sharply sluggish and profit share rose. The profit rate which had been decreasing due to high capital accumulation for a long time was on the upturn. This paper tried to systematically explore the changes in terms of the critical variables of capital accumulation: profit rate and its determinants, capital composition and profit share. Especially this research argued there had been the transition from liquidity crisis to realization one in the view of crisis form before and after the crisis in 1997.

Key Words: capital accumulation crisis form, liquidity crisis, realization crisis

Received: Aug. 18, 2011. Revised: Oct. 27, 2011. Accepted: Dec. 20, 2011.

* Associate Research Fellow,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Mullae gongwon gil 5, Yeongdeungpo-gu, Seoul 150-836, Korea, Phone: +82-2-2629-7401, e-mail: econdjlee@keis.or.kr